

KERI Brief

복지천국의 나라, 스웨덴의 불공평한 세금제도: 2005년 상속·증여세 폐지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jkhyun@keri.org)

스웨덴은 복지천국 국가로서, 보편적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진영의 모범국가로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이 복지천국인 사실은 알면서, 매우 불공평한 세금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적다. 스웨덴이 복지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불공평한 세금제도를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가장 민감한 세목이 상속·증여세이며, 실제로 한국은 상속·증여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들 중의 하나다. 그러나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국민들은 다른 세목에 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정책방향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같은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2005년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한국 국민들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구조는 스웨덴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상속·증여세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대조적이다. 한국에선 경제민주화란 압축용어를 사용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책들의 배경에는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구조하에서 소유지배 구조를 유지하려는 경제행위에 대한 비판이 높으며, 이를 차단하려는 정책의도이다.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을 통해, 우리의 상속·증여세 정책에 대한 근본사고를 바꾸어 볼 때가 되었다. 즉 상속·증여세를 형평성 차원이 아닌,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검토배경

□ 보편적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웨덴을 모범국가로 많이 인용하지만, 이는 정책의 한쪽만을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제성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세금임. 스웨덴은 매우 불공평한 세금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우리는 스웨덴의 모든 제도가 공평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천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세금제도가 형평성 대신에 경제성장할 수 있는 불공평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며, 이는 경제학의 기본원리인, “이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보여줌.

□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평성 측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이 상속·증여세이므로, 스웨덴의 2005년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은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

2. 스웨덴 상속·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

□ 1991년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제 등에서 정책목표를 형평성에서 경제성장으로 바꾸는 정책개혁이 있었지만 상속세제는 포함되지 않음.

□ 2004년에 비로소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2005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폐지하는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가짐.

- 상속세제를 폐지하였지만 전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 대신에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적용.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최고한계세율이 국세 25%와 지방세 30~33%를 포함하면 55~58%인 반면, 자본소득은 지방세는 없고 국세로 단일세율 30%가 적용됨.

- 상속·증여로 인한 자본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05년 이후에는 상속에 따른 세부담이 형평성보다는 경제성장에 정책목표를 둔, 부 친화적인 정책(wealth friendly policy)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1] 상속 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주요 내용
1884	• 취득형 상속세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세율은 법적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0.5%, 없을 경우에는 0.6%
1894	• 상속세제의 세율이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 최대 1.5%
1915	• 현대적 의미의 증여세제가 처음으로 도입
1933	• 정부는 유산형 상속세제(estate tax)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대신에 기존의 상속 및 증여세부담을 높였음.
1941	• 상속 및 증여세제 개정
1948	• 유산형 상속세(estate tax)를 시행
1959	• 유산형 상속세제가 폐지되었으며, 대신 취득형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증가
2004	•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취득형 상속세(inheritance tax)를 폐지
2005	•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

3. 상속세제의 경제적 효과

(1) 미시적 접근

□ 상속세제는 과세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전체 세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은 낮지만, 개인입장에서 부과하는 수준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상속세제가 경제주체들에게 주는 경제적 행위변화는 매우 큼.

- 스웨덴은 1948년에 기존의 취득형 상속세제와 함께 유산형 상속세제를 도입함. 상속에 대한 세금이 강화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기 한 해 전인 1947년에 증여행위가 갑자기 대폭 증가하였으며, [표 2]와 같이 스웨덴의 한 지역인 Dalarna에서 발생한 증여행위의 건수와 증여액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음.

[표 2] 스웨덴 Dalarna 지역의 증여행위 변화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증여건수	48	96	70	185	204	564	234	122
증여액	520	1,611	644	3,343	3,035	11,752	3,533	117

주: 증여액의 단위는 천 SEK임.
자료: Ohlsson(2007)

- 경제학에서는 제도가 사람들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상속세 폐지가 사람들의 수명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스웨덴에서 상속세제가 사망시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 실증연구로 일별 사망자료를 통해 분석한 Eliason and Ohlsson(2007)이 있음.¹⁾ 이 연구는 상속세 폐지가 있었던 2005년 전후의 사망패턴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으로 2003~2004년과 2004~2005년 12월 3일~1월 14일까지 사망건수를 비교하였음. 스웨덴 상속세제 개정시기와 연계해서 분석한 결과, 상속세 폐지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2004년 12월 16일 다음날의 사망자 수는 16.3% 감소하였으며, 2004년 12월 31일에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 상속세제 정책변화가 경제주체들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행위를 변화시키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음. 상속세 폐지정책이 기업활동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

1) Eliason, M. and H. Ohlsson, "Living to save taxes", Working Paper 2007-8, Uppsala University, 2007.

[표 3] 2005년 이후 스웨덴의 경제성장률

경제 성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질 GDP 성장	연간 성장률 %	4.2	3.2	4.3	3.3	-0.6	-5.0	6.2
가계 가처분소득 내 순저축률	%	4.7	4.0	4.9	7.2	8.9	11.2	8.5
총고정자본형성	GDP 대비 비율 %	5.7	8.1	9.2	8.9	1.4	-15.5	7.7

자료: OECD Factbook statistics.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 바람. OECD Factbook 2013)

(2) 거시적 접근

□ 2005년 상속·증여세 폐지정책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완만히 증가했음을 보여줌.

- 스웨덴의 획기적인 세제개혁은 1991년에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형평성 위주의 조세정책에서 경제성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었음. 주된 내용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는 방향이었음.

4. 상속·증여세 폐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지

□ 상속세 폐지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지가 필수적임.

- [표 4]는 Hammar, et al.(2006)의 2004년 스웨덴 국민들 중에서 연령대가 15~85세의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각 세목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에 대한 간접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음.

○ 각 세목에 대한 증세 혹은 감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상속증여세의 대폭 감세 혹은 폐지 비중이 약 50% 수준으로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이 결과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반응으로 스웨덴 국민들의 사고는 우리와 다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감세정책에 대해 부정적 정책선호를 보이나, 상속·증여세 감세 혹은 폐지안에 대해 찬성하였음.²⁾

○ 한국 사람들의 인식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스웨덴에선 상속증여세 폐지방안에 대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찬성하는 의견을 보여주었음. 따라서 이념성향과는 무관하게 상속증여세 폐지가 쉽게 현실화될 수 있었음.

2) Hammar, et al.(2006)은 이념적 성향에 대한 변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해서 통계분석한 결과, 더미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가짐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스웨덴 정부가 국민들이 세율인하 혹은 세목폐지에 대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상속 및 증여세를 폐지한 것은 정부의 지지도를 높이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음.

[표 4] 각 세목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반응결과

(단위: %)

세목	대폭감액/혹은 폐지	소폭감액	현상유지	소폭증액	대폭증액
부동산세	39	32	17	1	0
상속세	52	18	12	3	1
증여세	48	19	14	3	1
사회보장세	14	36	25	2	0
주 소득세	12	40	32	5	0
자동차세	13	39	33	5	1
지방 소득세	8	42	35	5	0
주세	20	35	25	6	6
환경세	19	30	29	10	3
부유세	25	18	24	13	6
법인세	6	15	29	11	2

주: 전체 표본 수 1,690개
 자료: Hammar, et al. (2006)

5. 한국에의 시사성

□ 한국 국민들이 스웨덴 국민들과 형평성에 대한 인식구조에서 차이가 날까?

-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World Value Survey 자료에 있는 소득불균형에 대한 사고차이를 [표 5]를 통해 살펴보면,³⁾ 평균치가 한국 6.5인 반면, 스웨덴 6.1로서 한국 국민의 인식구조가 소득분배보다는 성장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지만 한국과 스웨덴 국민들의 인식형태는 비슷한 분포를 보여줌.

3) 이 문항에 대해서는 10개 스케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는데, 1이 의미하는 바는 "Income should be made more equal."이며, 10은 "We need larger income differences incentive."를 의미함.

[표 5] 소득불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

(단위: %)

척도	한국 (2005)	스웨덴 (2006)
균등한 소득분배		
1	4.4	6.2
2	4.0	3.0
3	10.3	8.0
4	4.9	8.4
5	7.9	11.2
6	8.1	11.4
7	19.2	17.2
8	19.3	21.4
9	11.7	6.9
10	10.1	6.2
유인책으로 소득격차 필요		
평균치	6.5	6.1
조사 수 (명)	1,199	992

자료: World Value Survey

□ 인식구조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에선 상속증여세가 폐지되었는데, 한국에선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뭘까?

- 스웨덴에선 상속증여세를 형평성 차원보다는 경제성장 측면으로 사고하는 반면, 한국에선 상속증여세를 세대 간 형평성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생각함.

□ 우리도 상속·증여세를 형평성 측면이 아닌, 경제성장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대기업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음. 정부에서 비난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들의 행위는 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즉 높은 상속·증여세 구조하에서 기업의 소유지배를 유지하려는 경제행위의 결과이므로, 이러한 패러다임하에선 정부와 대기업 간 법적논쟁 등 갈등구조만 높아질 것임.

- 이제 상속·증여세를 통한 대립구조의 정책에서, 경제성장을 통해 모두가 잘살 수 있는 통합의 정책으로 상속·증여세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